

[성명서] 성신여대는 자치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언제부터 대학이 헌법조차 무시해도 좋은 초법적인 기관이 됐단 말인가. 학교의 비리의혹을 해명해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재갈을 물리고 이들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으니 말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하는 헌법의 가치조차 외면하는 대학이 인간에 대한 도의와 학문의 진실성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을 자처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성신여대 학교 본부는 작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성신 퍼블리카’ 기자 한 명을 비롯한 재학생 6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였다.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을 다룬 기사에 근거가 없고, 의혹 해명 요구가 대학교 수시 전형 기간과 맞물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때는 2012년 10월, 심화진 총장의 비리를 담은 익명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됐다. 탄원서는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후 심화진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고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3월, 이사회는 조사보고서를 성신여대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했으나, 심화진 총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성신여대 자치언론 ‘성신 퍼블리카’는 작년 9월 개강호 1면에 ‘심화진 총장의 ‘성신월드’라는 기사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다뤘다. 그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본분이자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언론 본연의 권리였다. 하지만 기사를 게재한 이후 ‘성신 퍼블리카’는 학교 측으로부터 집요한 탄압을 받게 된다.

기사가 게재되고 며칠 후 ‘성신 퍼블리카’ 편집장은 성신여대 본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학생활동지도위원회에 따로 불려나가 기사를 작성한 경위를 말해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학생은 원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나?”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당신들은 원래 정당한 의혹 제기와 언론 활동에 대해 그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성신 퍼블리카’에 대한 압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총장을 비판한 기사는 이내 ‘성신 퍼블리카’ 홈페이지에서 말도 없이 블라인드 처리됐다. 한편, 성신여대 학교 본부는 ‘성신 퍼블리카’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생 단위에 압력을 넣는 등 언론 탄압을 공공연히 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사 의뢰 역시 ‘성신 퍼블리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학생을 경찰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경찰 뒤에 숨어 버린 성신여대 학교 본부는 학생 대신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학생은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성신여대 학교 본부는 즉각 자치언론 ‘성신 퍼블리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니 썩기 이전에 멈춰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6일
<자치언론네트워크> 일동